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0월 23일(통권74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한국의 대응방향

박 휘 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약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정확한 말로 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후(後)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미국은 '선 핵무기 폐기, 후 종전선언'을 주장하여 추가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전선언을 체결하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우려한다. 종전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선의로 볼 경우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통하여 판단해보거나 북한의 의도를 추측해 볼 경우 그와 같은 기대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아직도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선의보다는 악의에 더욱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개념 설명

- **평화**: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용어이지만, 자유나 평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가 그러하듯이 보편적이면서 명확한 정의는 곤란. 국제정치학에서는 "전쟁의 부재"(absence of war)로 정의. 노르웨이의 갈통(Johan Galtung)은 전쟁의 부재 상태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명명하면서, 번영이나 국내적 안전까지 포함하는 평화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제안은 모두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
- **평화체제**: 평화체제는 평화에 '체제'를 추가한 것으로서,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나 장치를 구비한 상태를 의미.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평화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중요.
- **평화협정(조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서상의 약속으로서, 국가 간의 전쟁 및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약속하는 포괄적인 내용. 주로 군 지휘관에 의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나 최근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평화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중요시.
- **종전선언**: 이에 관한 명확한 영어 단어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님. 전쟁의 재발이나 차후 평화를 위한 보장 장치가 없는 종전에 관한 선언이 의미가 있기 어렵기 때문임.

한반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의지라도 밝히자는 제안 수준

- * **종전선언 사례**: 어떤 국가가 전시 적용되는 법률의 효력 종료 등을 위하여 국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적은 있으나 양국 간에 종전선언에만 합의한 사례는 없음. 일부에서는 미국의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총서기장 간에 열린 몰타 정상회담(Malta Summit)을 언급하지만, 여기에서도 냉전종식을 위한 어떤 발언이나 합의가 발표되지는 않았음.

종전선언 논의 경과

- 1970년대부터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요구. 특히 이때 북한은 남북한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였고, 현재도 그러함.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북한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
- 2006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 미국은 이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
- 다만, 한국의 일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크게 다루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무마

시키는 방편으로 종전선언 수용 가능성 토의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을 통하여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문귀상으로는 남북이 종전선언의 주체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정부는 현재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 지속(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 같으나 북한이 그것을 허용할지 속단하기는 곤란)
- 2018년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도 미국에게 종전선언 합의를 지속 중용(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했다는 추정 정도 존재)
- 싱가포르 회담 후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기회를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요구
- 현재 미국은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 **종전선언 요구의 북한 의도 분석:** 추측할 수 밖에 없으나 대남전략의 구현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매우 당연해지고,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 존재.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측면

[기회]

-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관

한 일시적인 진전 가능

- 북한도 어느 정도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
- 북한이 평화를 빌미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합의할 경우 북한의 평화공세 차단 가능

[위험]

-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따라서 6.25전쟁이 종결되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설득력이 큼. 이미 북한은 공공연하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음.
- 정전협정이 채택될 경우 얻을 것을 얻은 북한이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 북한 주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니 비핵화라는 미끼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임.
-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결될 가능성.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했는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서 공격 가능.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
- 한국 내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한국의 대북 전쟁억제 및 방어태세의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
- 철저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명분 상실. 일부 국민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오히려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

한국의 정책 과제와 제언

-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 언론과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

- 종전선언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없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에도 주목할 필요. 북한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증거임.
- 종전선언 합의 후에는 북한에 의한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지 않은 지를 반성
- 정부, 군대, 국민 모두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 및 협력이 절대적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할수록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고, 북한이 한미동맹을 비판할수록 한미동맹은 필수. 북한에게 한미동맹을 이간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전달
- 한미동맹은 단순한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한미동맹의 약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 약화 특히 사드사태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위협에도 직면할 가능성 상존
- 군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협의되든 또는 합의되든 언제든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